

美·日 금리쇼크에 엔저 장기화… ‘엔캐리 청산’ 압력 커진다

엔·달러 158.18엔, 160엔선 재위협
美·日 외환공조에도 약세 흐름 지속
美 장기채 급등 충격 주요국 확산
日 10년물 30년 만의 고점 기록
기준금리차 축소 전망에 자금회귀

미·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엔화값이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엔화의 상대적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도 본격화하고 있다.

◆ 美 국채금리 ↑… 엔화 약세 지속

20일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의 엔·달러 환율 증가는 달러당 158.18엔을 기록했다. 이날 미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매입 예고가 전해지자 직전일의 159.61엔보다 1.33엔 내렸지만, 뉴욕장 종료 이후 이어진 시드니장과 도쿄장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오는 9~11월의 장기채 바이백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환율이 재상승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을 다시금 목전에 뒀다.

앞서 미 외환당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규모 엔화매수를 실시했다. 엔·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60엔을 웃도는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값을 의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대규모 달러 매도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으며, 미·일 외환당국은 이후 엔화값 부양을 위한 공조 사실을 확인하며 추가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엔·달러 환율은 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직후 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내렸지만, 최근에는 달러당 160엔 선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엔화 약세를 부각시켜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연 5.33%까지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10년물 금리도 장중 4.76% 수준까지 올랐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서 국채 발행량이 빠르게 늘었고,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키워 국채금리를 끌어 올렸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장기채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규모를 기존 20억달러 규모에서 40억달러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금리쇼크’… ‘엔캐리 청산’ 우려도

미국 발(發) ‘금리쇼크’는 글로벌 채권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 국채는 선호도와 안정성이 높아,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 채권시장의 자금을 빠르게 흡수해 주요국 국채 금리도 상승한다. 지난 18일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16%까지 올라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같은 날 10년물 금리는 2.96%까지 올라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자산시장에 ‘엔 캐리 트레이드(엔 캐리)’의 청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엔 캐리’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전체 엔 캐리 규모는 약 506조엔 수준인데, 이는 2026년 일본 정부의 연간 예산인 122조엔의 약 4.14배다. 엔 캐리 자

금이 주요국 자산시장에서 이탈하면 주요국 증시나 환율 등에도 부담이 커진다.

엔화 약세의 장기화도 엔 캐리 청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9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적극적인 개입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 연준(Fed)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미·일 기준금리차가 축소되면 엔 캐리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미·일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한 반면, 엔저는 지속되며 엔 캐리 투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일본 국채 금리 급등과 엔저 현상에 따른 헤지 비용 상승으로 해외에 투자되었던 일본 생보사 및 연기금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美 군함 2척 해외건조… K-조선, 현지화 시험대

백악관, 90일 내 경쟁조달계획 마련
후속 물량은 미국 내 생산 원칙 적용
기술 라이선스·공급망 구축도 조건

미국 정부가 외국 조선사에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최대 2척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생산을 원칙으로 기술라이선스와 인력·공급망 현지화까지 요구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도 시장 진입에 따른 실익과 부

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13일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활용해 수상전투함과 통합 화물 해상보급선 등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외국 조선사 참여를 허용하는 대통령 메모를 발표하고, 국방부 등에 90일 내 경쟁조달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외국 조선사는 미국 조선소 확보, 미국인 고용·훈련, 독점 건조기술 라이선스 제

공, 미국 내 공급망 구축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2척은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지만 이후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지난 2월 해양행동계획(MAP)의 ‘브리지 전략’을 구체화해 동맹국 생산능력으로 자국 건조 역량을 보완한 뒤 생산 체제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구상이다.

첫 번째 조건인 ‘조선소 확보’부터 현지생산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평가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내 2척

건조 이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익성이 날 보장은 없고 진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지화 프로젝트도 현지 생산이 어려워 기존 생산거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해야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인 ‘미국인 고용·훈련’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준비에 나선 분야다. 세 번째 조건인 ‘독점 건조기술 라이선

스 제공’은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미 정부가 본국 조선소의 기술 라이선스를 요구하지만 원천기술까지 넘길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네 번째 조건인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은 국내 기자재업체의 동반 진출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미 정치권과 조선업계의 반대는 변수다. 미 의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으로 해외 함정 건조 예산을 제한하려 하고, 미국조선업협회(BSAI)도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kdrak@



metro



“ 부산외대에서 꿈을 키우고 세상을 경험하세요! ”

BU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가장 글로벌한 대학

가장 행복한 대학

가장 혁신적인 대학

최고의 인성·영성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본관 3층 입학관리팀]
T. 051.509.5302~5 F. 051.509.5307 www.bufs.ac.kr